[카드뉴스]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11월 #2



FTX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풍전등화 위기 상황에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내의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분주하다. 한편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에 시행될지 유예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세밑이다.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 절실하다.

금투세 2년 유예, 진통 예상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강조.
야당은 조건부유예 조건을 제시했지만, 차후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예정.

* **금융투자소득세법** '금투세'로 불리며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제도

정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2025년까지 유예



야당 유예 조건 절충안

-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 0.2→0.15% 추가 인하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10억→100억원) 철회



정부, 야당 절충안 거절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은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 세수가 8천억 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 1천억 원 더 줄어든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투세 유예 당연하다”

지난 11월 18일 금융위원회와 7개 증권사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 제기.
올 들어 코스피가 20% 이상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와중에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증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

기획재정부 금투세 유예 당위성 설명

- 2023~2024년 금투세 유예 기간에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5천억 원 감소 전망
- 기존안대로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0.08%포인트 인하하면 개인투자자 세 부담은 3천억 원 증가 전망
- 2020년 도입 당시와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 금투세 시행되면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투자자 이탈 우려
- 또한 금투세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불리



금융당국, FTX 사태 대응 위한 규제 마련 분주

"FTX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2. 11. 14 민당정 간담회)

지난 11월 13일 자산 가치 320억 달러(42조 원)로 평가받던 세계 3위의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몰락**으로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제 체제 정립에 분주.**

돋보기 금융위가 마련한 3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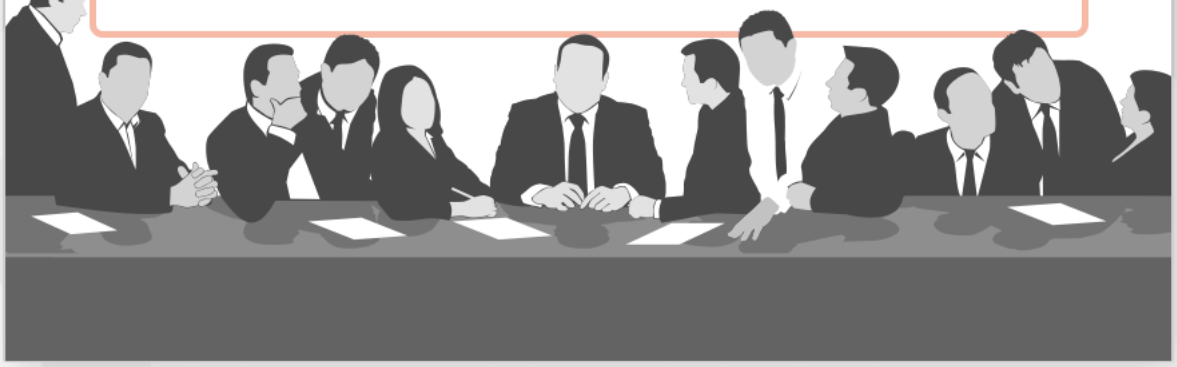
1.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탄력성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 · 동일위험 · 동일규제 원칙 적용
3. 글로벌 규제와 정확성 확보

부산시, FTX 사태에도 가상자산거래소 추진

FTX 사태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 지속을 발표**하며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

디지털자산특별거래소 추진위원회 발족

- 부산시는 12월 중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발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래소 설립 추진 재검토설 일축
- FTX와의 업무협약은 선언적인 측면이 강해 시 입장에서는 파산과 관련 없고, 12월 내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안건을 상정하고, 규제 항목을 정비할 계획
-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글로벌 거래소의 특금법 규제 유예에 대한 샌드박스 신청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야! 너도 있어?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통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와 IT 업계가 치열한 고객 선점 경쟁을 펼친 결과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
연말부터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현재 492개)로 크게 확대**
퇴직연금과 공적연금 가입내역이며, 보험상품 정보도 대거 업데이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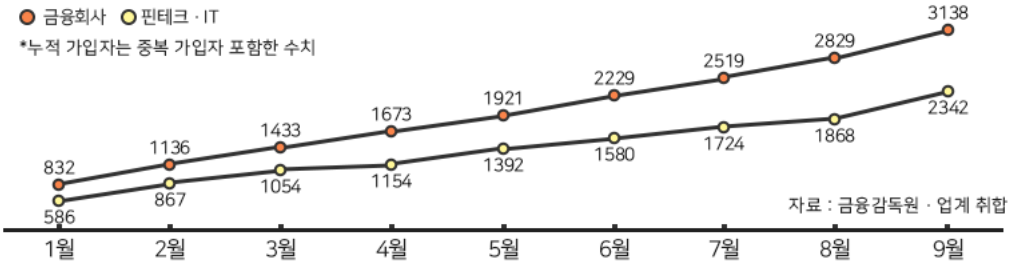
누적 가입자 수 단위 : 만명



서비스 제공 업체 단위 : 개사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 변화 단위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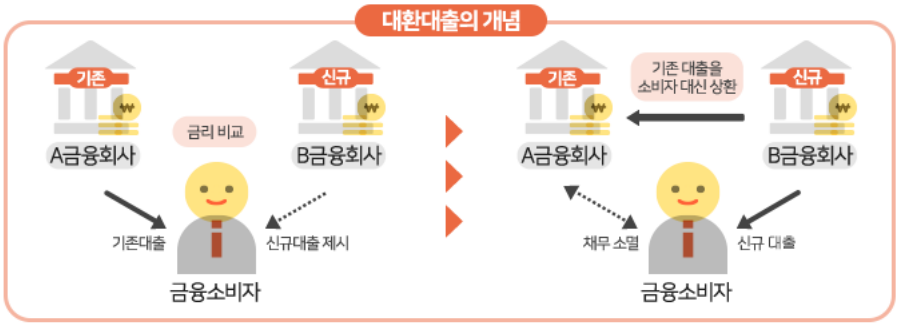


koscom NEWSROOM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5월에?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5월 구축될 전망.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존의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이슈 분석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효과

- 기준금리가 2012년 6월 이후 약 10년 5개월만에 3.25%에 이르는 등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이자절감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관심 증폭
- 금리경쟁 시스템이 마련돼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는 물론, 대출정보 부족 · 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락인효과를 해소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이 다수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